

#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13
----------	------

발의연월일: 2023년 04월 일

발 의 자: 조정식, 정용한, 김보석, 이영경,  
추선미, 서희경, 김종환, 김보미,  
박주윤, 안광림, 박종각, 김장권,  
박명순, 박은미, 구재평, 안극수,  
황금석, 서은경, 이준배, 조우현,  
박기범, 김선임, 이군수, 고병용,  
최종성, 강상태, 정연화, 윤혜선,  
박경희 (이상 29명)

## □ 조사 목적

-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하셨으며, 시민 1명은 중상을 입으시는 매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 지난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가 발생 원인은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고, 당시 유사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2018년 이후 분당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단 한곳도 없었음.
- 또한 정자교는 수차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검사결과가 ‘양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사고는 성남시의 안전관리 행정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 앞으로 더 이상의 붕괴 사고가 없도록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레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 전수조사와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남시 전체 교량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행정 관련 매뉴얼 정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러한 붕괴 사고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 조사 범위

- 성남시 예산재정과, 도로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맑은물사업소 등 위사업 관련 공무원 및 산하기관, 각종 용역 및 업체 관계자 등

## ☐ 조사 위원회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 조사 기간

- 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80일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에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필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